



特別 銓衡日程 발표

건축사 자격시험도 함께

금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이 오는 8월 7일로 확정발표되었다.

건설부 공고로 발표된 관련 내용을 보면 1차와 2차로 나누어 보게 되는 시험일자는 1차가 8월 7일, 2차는 추후에 개별통지키로 되어 있으며 응시 자격은 건축사법 제14조에 의한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사법 제16조에 의한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동법 제14조에 의한 각1호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건축사법 부칙 제2항에 의한 2급 건축사로서 역시 14조 각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시험 과목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의 경우 1차에 건축구조, 시공, 법규(이상필기), 2차 건축계획(필기), 건축설계(실기)이며 특별전형에는 1차 필기 시험으로 건축구조와 계획 그리고 2차에는 건축설계를 실기로 치루게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로 예정인 이번 시험에 따른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마감되었다.

그린벨트에 공원개발 계획

휴식공간 점차 확대키로

정부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도심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근교에 휴식공간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부터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우선 1차로 서울근교 수도권 지역에 5만평안팎의 중간규모 근교유원지 15~20개소를 용역을 주어 연말까지 대상지 선정과 개발방법 등을 확정짓도록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새로 개발될 근교 유원지는 대도시 외곽지역에 묶여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 지금까지의 유원지 개념과는 달리 스포츠 및 가족놀이등 전전한 휴식시설에 중점을 두어 도시의 확대 개발을 막으면서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근린 공원이 있으나 시설이 크게 모자란 실정이며 근교에 민간이 설치한 農園 유원지등은 비싼 입장료에다 유흥업소의 난립, 행락인파 등으로 전전한 휴식처로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같은 점을 감안, 앞으로 개발되는 근교유원지는 버스나 지하철 철도에서 내려 10~20분 정도의 도보거리에 넓은 잔디밭과 테니스코트 배드민턴 배구장등 간단한 스포츠 시설을 갖춰 도시락만 준비해가면 부담없이 즐길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53개소 1백25평방km(3천7백50만평)가 공원 관광지 유원지등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지정돼 있으나 인구수에 비례한 휴식공간은 선진국에 크게 밀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은 2평방m에 지나지않는데 비해「뉴욕」은 19.2 「로스앤젤리스」 19.7, 「베를린」 26.1평방m에는 비교가 안되며 東京의 3.4평방m에도 뒤지고 있다.

賃貸빌딩 신축 억제

住宅건축 등은 촉진키로

정부는 국내 경제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상업용 건축과 소비성 内需등 전전치 못한 방향으로 일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음을 중시, 빌딩 임대용 건물 등 주택이외의 건설부문은 억제시키고 고급 음식점 등 서비스부문과 자동차 등 내부 소비재등에 대해서는 課稅조치를 강화, 지나친 팽창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긴축기조를 견지, 올해 총 통화증가율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대기업의 비생산

적인 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금지 및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투자 때 자기 자금 총당 비율을 높여 현재 자기자금 1에 대해 5까지 용자해 주던 것을 1對2로 자기 자금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경제 동향에 관한 정책 대응방향을 이같이 발표, 관련 각 부처는 이 방향에 따라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주택이외의 부문의 건설을 억제키 위해 착공되지 않은 공공 부문 건설 사업은 工期를 뒤로 미루고 상업용 임대 건물이나 빌딩등 민간 건설은 용자 제한등 여신관리를 통해 조정키로 했으며 대기업의 과다한 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신규사업 허가와 연결, 새로 한도를 책정하는등 규제키로 했다.

또 재정부문에서 세출절감을 강화하고 가능한한 稅收를 늘려 國債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內需위주 성장과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계속 집중될 경우 국제 수지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內需 억제를 통해 수입을 管理키로 했으며 설비 투자를 금년중 9.5% 증가에서 내년에 14% 증가로 확충하고 수출 촉진대책을 수립 실시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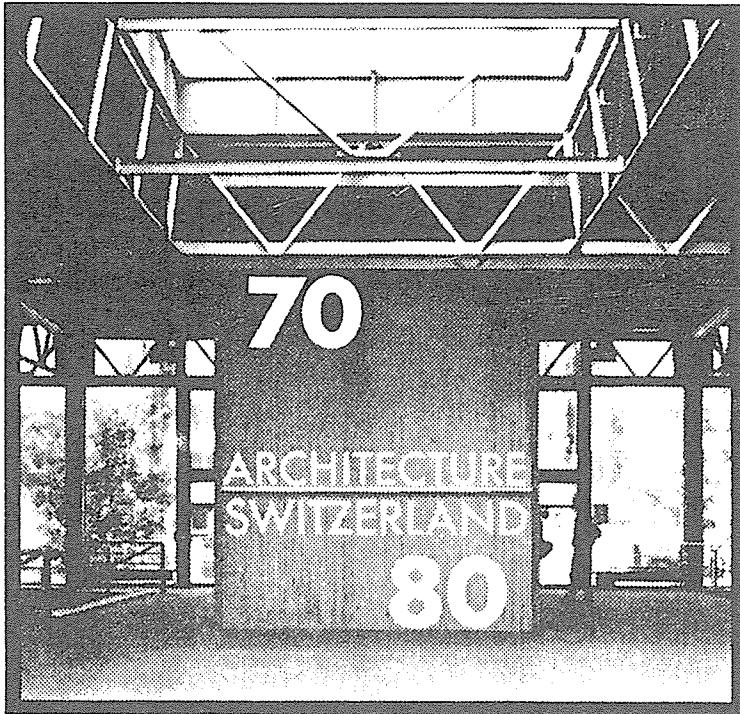
또 9.27조치에 따른 계열 기업群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통화 긴축 견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며 호황국면에 대비, 부처별로 人力원자재 공장 立地등 공급에로 부문은 사전점검,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각부처별 실천방안을 수립키 위해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대책 위원회를 금명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최근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중 경기예고지표가 3월의 1.4에서 1.5로 올라섰고 종합지수는 호황 국면에 접근했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1·4분기중)은 79.2%로 전반적인 과열 상태는 아닌것으로 분석했다.

스위스建築展 개최

70년 이후 작품 등 선보여



70~80스위스 건축전 (Architecture in Switzerland) 이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교보빌딩 1층 세종홀에서 열렸다.

70년부터 10년간에 세워진 건축작품 가운데 50여점이 선을 보인 이번 작품전에는 56명의 스위스 건축가들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으로 스위스 및 유럽 현대 건축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작품가운데에는 스위스의 자연적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설계한 촌락이나 특수시설, 자연석을 소재로한 건축물들이 눈길을 끌었고 그밖에 유니크한 형태의 공공시설 및 계획작품도 이채로웠다.

이번 전시는 건축가협회 주최로 주한스위스 대사관과 문화재단인 PRO HELVETIA FOUNDATION IN J-URRCH 후원으로 열렸으며 그밖에 (주)대우와 대한교육보험(주) 그리고 (주)서울건축콘설탄트의 협찬이 있었다.

首都圈 1 2개 생활권으로

기본계획마련 공청회

정부는 과밀현상을 빚고있는 首都圈의 효율적인 재정비를 위해 이 지역을 이전축진 제한정비 개발誘導 개발보류 자연보존 등 5개圈域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서울江北, 江南, 議政府 등 12개 생활지구로 세분, 각지구의 特性에 따라 開發 정비 保全업무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国土開發研究院에서 열린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밝혀진 정부試案에 따르면 현상태가 계속될 경우 제 2차 장기국토개발계획의 목표연도가 되는 오는 91년의 서울시 인구는 1천 1백90만명으로 전인구의 27%를 차지, 異狀비대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9백60만명선으로 억제, 전국인구 중 서울인구 비중을 현재 22.3%에서 21.4%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서울의 江南北간 40대60의 비율을 91년까지 江北48 江南52가 되도록 재배치하고 江北의 商圏도 과감하게 江南지역에 분산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기본구상은 먼저 지방자치제실시가 전제 돼야 하며 江北에 있는 종합청사를 서울大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수도청 같은 통합된 정비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試案은 수도권 5개권역기능을 ▲이전축진권역의 공장 학교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유발 시설을 圈域밖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해 이들 시설물의 신증설을 규제, 기존 시설을 활용한 행정중심지로서의 국제적이고 전국적인 중추기능을 맡게 한다. ▲仁川, 水原, 安養, 城南 등 제한정비 권역은 이전 축진지역에서 오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받아들이되 기존시설은 제한적인 증설만 허용한다. ▲平沢, 安城, 安仲 등 京畿남부지역의 개발유도권역은 수도권내에

서 이전하는 각종 인구유발시설을 과감히 받고 점적지역인 東豆川·江華 등지의 개발유도 권역은 도시화가 촉진되는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 근교공업지구로 육성한다. ▲한강상류의 加平, 麗州 등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상수도취수원인 점을 고려, 농림고냉지 채소등 이외에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개발을 억제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밀집된 도심과 외곽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강변도로-남부순환도로-3·1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연장 1백71km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金源교수(서울市立大)는 仁川직할시와 京畿道를 폐지 서울市에 흡수시켜 首都廳을 신설, 통일된 수도권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으며 金仁교수(서울大)는 서울大를 이전하고 이곳에 江北의 종합청사를 옮겨 관악산과 果川지구를 행정업무지역으로 육성, 江北의 소산을 피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KS資材 사용의무화 확대 工振庁, 하반기부터 실시검토

건물을 지을때 KS(韓國工業規格) 표시제품만을 써야하는 건축 자재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KS표시 건축 자재 사용의무화 대상품목을 현재의 27개에서 페인트 칠강재등 39개를 새로 추가, 66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자재 외에도 사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 등 각종 공산품에 대해서도 KS 표시제품의 사용의무화 대상품목을 새로 지정, 확대하기로 했다.

工業振興廳에 따르면 KS표시 건축 자재 사용의무화 대상품목 확대 방안은 이미 건설부와 합의를 보았으며 이에따라 年内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대상품목을 지정,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새로 지정될 사용의무화 전자재는 ▲합성수지 에멀전페인트(외부용) 등 도료재 14종 ▲아현도강판등 철강재 7종 ▲위생도기를 비롯한 급수위생재 6종등 모두 39개 품목이다.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평방m 이상 건물을 지을때는 반드시 KS 표시제품만을 쓰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의 허가및 승인취소 ▲공사정지철폐 개축 ▲설계자 공사감독자 공사시공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건축법 42조)

工振廳은 또 전자재이외에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 점차 KS표시 사용의무화 대상품목을 늘려가기로 하고 우선 국민생활의 안전이나 보건위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전기 위생용품이나 공업제품의 핵심 부품 원자재등을 대상으로 KS표시 사용의무화 대상품목과 사용의무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따라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법적 제재규정을 삽입하거나 각급행정 기관의 인허가시 허가 요건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중이다.

현재 정부 및 그 투자기관은 공업

표준화법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모든 제품구입시 KS 표시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돼있다.

4 월말 현재 工振廳이 허가한 각종 KS표시제품은 모두 4 백91개 품목이다.

南山공원 면모바뀌

서울시, 기존건물등 철거기로

서울 南山공원주변 풍치 지구가 공원용지로 묶여 앞으로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 행위가 일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인 남산에 대형건물들을 세우고 전망을 가리는 등 경관 훼손 행위가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남산 공원확장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공원용지로 묶인 곳은 기존 풍치지구 중 남산 순환도로 위쪽의 승덕 교회 및 외인 주택 주변, 자유센터 사파리클럽 보광동 수원지 호텔신라 타워호텔 하이야트 호텔주변 13만 6천 3 백여평으로, 장충동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등 4 개동 일부가 포함된다.

이로써 남산공원 면적은 75만 7 천 5 백여평에서 18%가 늘어난 89만 3 천 9 백여평이 됐다.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의 건물 신축, 증-개축 행위가 일체 금지 되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설치만 가능하게 된다.

풍치 지구에서는 3층 이하, 12 m 이하, 전폐율 30% 이하의 건물 신축이 가능 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 풍치 지구를 공원용지로 바꿔 금년말까지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원 내의 불필요한 시설 및 건물을 없앤다는 원칙아래 우선 승덕교회를 철거하기로 했으며 다른 건물들도 건물 수명연한, 보상비등을 정해 점차 다른지역으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다만 자유 센터와 신라-타워-하이아트등 3 개 호텔, 사파리클럽만은 건물 바닥 면적을 공원 용지에서 제외, 증-개축이 아닌 보수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남산 주변에는 그동안 88년 올림픽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많은 호텔들이 신축 또는 증축을 추진해와 물의를 빚었다.

서울建物 무허·위법 10%

서울시, 성북구가 가장많아

서울 시내 전체 건축물중 약 10%가 무허가 또는 위법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는 모두 1 백 9 만 9 천 3 백 채의 건물이 있는데 이중 10만 5 천 6 백 20채가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구분해 보면 무허가가 9 만 1 천 3 백 47 채이고 건축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도 법규를 어겨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 1 만 4 천 2 백 73채이다.

무허가 건물은 城北區가 1 만 2 천 5 백 36채로 가장 많고 다음이 東大門區가 1 만 5 백 83채 道峰區 9 천 5 백 51 채 城東區 8 천 2 백 54채 銅雀區 7 천 7 백 35채 등으로 나타났다.

또 위법 건물은 九老區가 1 천 7 백 6 채 鍾路區 1 천 6 백 14채 江西區 1 천 5 백 35채 龍山區 1 천 3 백 65채 銅雀區 1 천 1 백 31채 등이다.

地価체계 일원화 계획

토지평가 기관도 통일

정부는 같은 토지를 두고 용도에 따라 평가 가격이 각각 다른 현행 地價체계를 정부公示地價로 통일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地價체계 일원화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는 현재 내무부의 時價표준액과 건설부의 기준地價 國세청의 기준時價 감정원의 토지時價로 4 원화 돼있는 地價를 정부 公示地價로 일원화하고 토지평가 기관도 통일, 이 기관이 통일地價를 공시하여 세금을 매길때나 토지 수용시의 보상등에 기준 지표로 활용토록 했다.